

‘신두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천민성과 우중성에 대한 성찰

‘Shinduri’ capitalism and democracy

김왕배*

충남 태안군 신두리에 펼쳐있는 사구(砂丘)지역의 한 가운데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다’라는 깃발이 꽂혀 있다. 이 글은 공간기호학적 방법을 동원해 이 깃발의 의미를 해독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개념을 추적해보고, 공공성과 책임, 나눔, 배려, 합리적 의사소통, 나아가 환경과 생태의식 등으로 규정되는 시민사회의 덕목에 대해 논의한 후 한국인들이 보이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분석해본다. 시민사회의 가치가 결여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무한대적 개발 욕망과 소유를 주장하는 천민성과 우중성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공공성의 사회, 시민정신과 결합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 글은 신두리 사구지역의 개발욕구를 재현한 깃발의 공간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현주소를 우중적 천민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어: 자본주의, 민주주의, 우중적 천민자본주의, 공간기호학, 개발연합

1. 문제의 설정

충청남도 태안군 서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두리에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모래언덕이 펼쳐져 있다. 넓고 고운 뱃사장을 따라 나지막한 풀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wangbae@yonsei.ac.kr)

과 양서류 등의 서식지가 되어 있는 이 청정 사구지역에 개발의 열풍이 불어와 이미 사구해안의 절반 이상은 축대가 쌓여 있고 그 축대를 따라 콘도미니엄과 음식점 등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서 있다. 일부 남아 있는 지역은 시민환경단체의 건의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지역으로 지정해 차량운행 등을 제한하는 한편 개발금지지역으로 묶어놓았다. 하지만 이 보호지역의 한 가운데에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다”라는 노란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이 글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공간적 경관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깃발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날 대한민국사람들에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연관된 다양한 이미지들, 예컨대 시장, 부르주아, 이윤, 경쟁, 착취, 불평등과 같은 내용과 평등, 권리, 공공성, 참여, 시민정신 등을 내포하는 민주주의의 이미지는 신두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바야흐로 글로벌 사회는 각 지역에 따라 질적인 속성과 변화의 속도에 편차가 있지만 ‘자본주의’로 수렴하고 있다. 소련 사회주의권의 붕괴 분단독일의 통합,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이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의를 향해 치달고 있어 이른바 ‘자본주의대 자본주의’의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¹⁾ 이러한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의 보장과 그 소유물 교환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와는 매우 밀접한 친화력을 지니고 있다. 근대자본주의가 출현하던 시기,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 조율되는 시장을 옹호한 사상은 바로 자유방임주의였고, 사적 소유와 교환, 그리고 경쟁을 강조한 것도 자유주의 사상이었다. 부분적으로는 충돌관계에 있으면서도 이 ‘자유’는 한 축에서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한 중요한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자유와 평등은 이미 루소와 로크 등의 사회계약론에

1) 이미 알베르는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저서를 통해 전지구자본주의의 수렴과 분파적 대립을 설명하고 있다(Albert, 1993).

서 확인되고 있었고, 그 자유와 평등의 대상은 정치적 권리는 물론 사적 소유에 관련된 것이었다(Locke, 1977; Rousseau, 1999).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친화력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역사의 국면에서 그래왔던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좁은 의미로 경제적 생산양식 차원의 범주로서 그에 대응하는 차원은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이며, 정치체제 차원으로 분류되는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차원은 전체주의(혹은 독재주의)이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다양한 조합(예컨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의 조합)이 가능하다(Alford and Friedland, 1986). 예컨대 한국과 같이 권위주의적인 국가에 의해 주도된 자본주의는 비록 시장과 자본-노동의 계급관계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일정 정도 자본주의가 성숙하게 되면 직업구조나 거래집단, 가치체계 등이 구조적으로 분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집단들이 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상호친화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발산업국가의 역사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급박한 자본주의화를 경험하면서 한강의 기적으로 묘사될 만큼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과정이 국가에 의해 독려되고 통제되어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일종의 국가자본주의 혹은 국가에 의해 지도된 자본주의로 분류되기도 한다(Deyo, 1987). 이러한 유형의 국가자본주의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해방 이후 형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개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천명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치의 실현은 오랫동안 유보되어왔다. 이후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노동계급과 시민사회의 성장, 민주주의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 일상의 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권리, 나아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논의할 만큼 발전해왔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언필칭 결속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²⁾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사유와 공유의 관계이다. 사적 소유를 어디까지, 어떻게 법적장치를 통해 인정하고 그 처분권의 재량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사적 소유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 양자의 관계는 항상 긴장과 대립, 그리고 양보와 화합의 관계를 보여왔다. 한국사회는 국가 강제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그 못지않게 강한 사회이다. 그러나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조화, 사유재산의 보존과 공유화의 필요성,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 그리고 그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협의에 도달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지체된 사회이기도 하다. 이 글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지역개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그 양자 간의 긴장과 대립관계를 넓은 의미의 기호학적 해석방법을 동원하면서 신두리 해안사구를 사례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신두리 해안사구에 펼쳐지고 있는 깃발의 기호 해석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가 재현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성격의 한 단면을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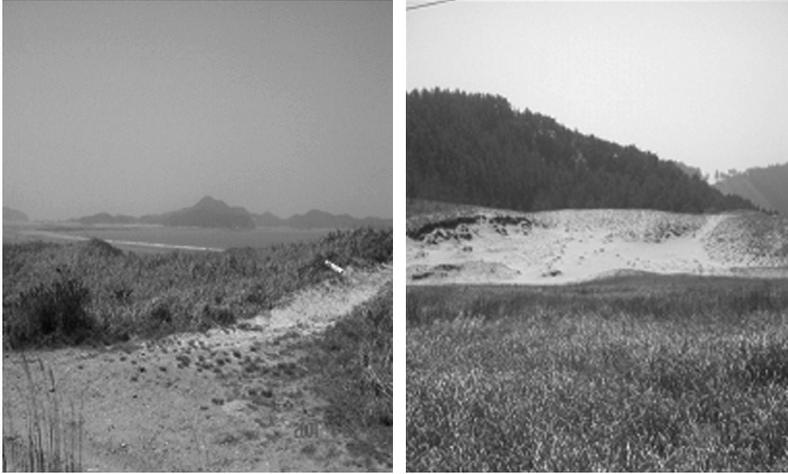
2. 논의의 배경과 공간기호학적 방법

1) 신두리 사구(砂丘) 개관

신두리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의 행정구역에 속한 조그만 농촌으로 넓은 갯사장과 모래언덕을 낀 청정 해안지역이다(그림 1> 참조). 신두리 해안사구는 3.8km, 폭은 500m에서 1.3km의 규모로 전체 면적은 약 80만 평에 달한다. 신두리 해안사구에는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왕소똥구리와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의 서식이 확인되어 자연성과 생태적

2) 북유럽의 복지국가군, 즉 사회민주주의체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비교해본다면 한국의 민주·자본주의의 위상에 대한 대략의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신두리 해안 사구지역



가치가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신문 기사를 통해 신두리 해안의 사구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도 사막이 있다. 천연기념물 431호인 신두리 해안사구는 바닷모래가 파도와 바람에 실려 해변에 쌓이는 역동적인 과정과 극한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생물들의 생존투쟁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작은 사막이다. 여기서 바다의 모래는 산으로 흐른다. 그 원동력은 센 바람이다. 신두리해안은 북서계절풍을 정면으로 받는다. 완만한 해저는 파도를 일찍 부서뜨려 먼 바다의 모래를 해변으로 옮겨온다. 해변의 모래는 겨울 동안 바람에 실려 안쪽으로 옮겨가며 ‘전 사구’ ‘2차 사구’를 형성하다 배후산지에 가로막혀 주저앉는다. 연간 모래 이동량은 1만5천여t에 이른다. 길이 3.4km, 폭 200m~1.3km로 해변을 따라 기다랗게 펼쳐진 사구의 독특한 경관 속에는 모래지치, 통보리사초, 표범장지뻬, 개미지옥 같은 동식물이 산다. 강한 바람과 따가운 햇빛, 염분, 물부족, 빠른 지형변화 등 거친 환경에 적응하는 것들만 살아남는다. 해안사구 안쪽엔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두옹습지가 있다. 모래 위에 생긴 호수다. 땅속에서 지하수층이 바닷물과 맞서는 곳이라 물이 마르지 않는다.³⁾

그러나 이미 신두리 사구의 2/3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전체 80만 평 중 30만 평 정도만이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 43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약 2만 5,000여 평의 두옹습지가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과 인접한 0.6km가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체 사구지역 중 일부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이미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전지역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두리 해안사구는 다양한 훼손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한국내셔널리스트, 2004: 16). 차량통제 구역인데도 일부 주민들이 이를 무시하는가 하면 미군부대가 훈련 중 사구지역에 캠프를 설치하기도 하고,⁴⁾ 최근에는 바로 신두리 앞바다의 청정해안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해 생태계 파괴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⁵⁾

-
- 3) 콘크리트 시설을 하면 해변이 망가지지만 움직이는 사구는 해안을 지켜준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해안개발로 사구는 힘을 잃고 있다. 이번엔 원유유출의 직격탄을 맞았다. 다행히 해변 모래만 손상됐을 뿐 사구 자체는 무사했다. 온전한 복원을 기대한다(《한겨레신문》, 2008.1.13).
- 4) 미군 충남 태안서 훈련 중 천연기념물 ‘모래언덕’ 훼손; 미군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천연기념물 431호인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모래언덕을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남 태안환경운동연합과 태안군은 “22일 오전 미 8군 소속 군인 250여 명이 트럭 40여 대에 나눠 타고 신두리 모래언덕에 진입해 모래언덕 1만여㎡와 멸종위기 사구식물인 초종용과 해당화 등이 훼손됐다”고 30일 밝혔다. 태안군은 “22일 오전 9시경 모래언덕 경비 근무자가 ‘트럭을 타고 온 미군들이 모래언덕에 천막 10여 개를 설치하고 차량을 몰고 다닌다’고 알려와 미군 쪽에 철수를 요구했으며,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3시경 미군들이 철수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2005.8.30).
- 5) 2007년 12월 7일 오전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홍콩선적 14만 6천t급 유조선 ‘해베이 스피리트’와 모 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 1800t급 부선이 충돌하면서 1만 500kℓ(8천t. 잠정)의 원유가 해양으로 유출됐다.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에서 유출된 원유가 인근 해안으로 확산되며 ‘사상 최악의 해양사고’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7.12.8).

<그림 2> 신두리 해안 사구에 꽂혀 있는 깃발



신두리 남부의 전사구는 오랫동안 자연상태에서 포락과 퇴적이 반복되는 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관광객과 차량의 진입으로 전사구가 파괴되고 도로와 건물이 건설되거나 신축되면서 포락(炮烙) 지역이 심한 곳도 발견되고 있다. 이곳에는 해수욕장과 관광지 개발을 위해 콘도미니엄과 대형 횡집 등이 들어서 있고, 현재도 몇 동의 콘도미니엄이 개발 중에 있다. 이 콘도미니엄과 음식점은 뱃사장과 사구가 형성된 지역의 가운데 축대를 쌓고 지어져 결과적으로 사구가 잘린 형국으로 남아 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사구지역은 전 사구지역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한 가운데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깃발이 꽂혀 있다(<그림 2> 참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다.”

개발을 통해 땅의 소유주들과 일부 마을주민들이 남은 사구지역의 개발을 금지하는 정부나 시민단체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니 사적 소유물을 상품화해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축적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허락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 곳 땅 소유주들과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므로 민주주의 원리를 따라 개발을 허락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2) 공간기호학적 방법

신두리의 공간적 경관을 분석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기호학적 방법을 동원하기로 한다. 기호학은 글로 쓰인 것뿐 아니라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들의 대상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는 일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특히 언어기호학자들의 분석에서 뿌리를 사회기호학은 그 의미를 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정치·경제·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찾는다. 즉, 텍스트와 그 외부맥락과의 상관성 속에서 텍스트 속에 내장된 의미를 포착하려 한다(Gottdiener, 1995; Hodge and Kress, 1988; Blonsky, 1985).

기호학은 일차적으로 대상의 사회적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의 방법론적 흐름인 해석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Palmer, 1969). 해석학은 대상을 만든 원저자(원래 행위자)들의 의도를 추정하는 작업에서 대상을 만든 이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읽는 이들의 주관적 이해에 의존하는 급진적 기호학적 전통 등 그 흐름이 다양한데 그 양자의 종합적 지점은 ‘대상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캐내어 ‘대상을 보는 이들의 이해’를 종합하고, 그 접점을 찾아가는 일이다(김왕배, 2000).

이러한 기호학적 해석학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차원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기호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표현물을 의미가 담긴 텍스트(text)로 보고 텍스트에 내장된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대상을 만든 이의 의도를 캐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전통은 전통적인 작품이해나 성경주해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만든 이가 어떤 의도로 작품을 만들었는지, 즉 대상을 어떤 의도로 재현했는지에 주목한다. 둘째는 이해자 스스로가 원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저자와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해석들이’ 제공될 수 있다.

위의 두 해석학적 기호학은 저자(원행위자)의 의도에 초점을 두는가 혹은 읽는 이의 의도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이해의 방향이 규정되는데, 얼핏 극단적인 지점에 서 있으면서도 결국은 이해자의 추체함과 주관적 이해 및 평가에 의해 그 의미가 구성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결국 해석자의 주관성에 크게 의존한다(철학아카데미, 2002, 2004; 기호학연대, 2002).

세 번째는 상호교차적인 방법으로 저자와 읽는 이가 서로 변증적으로 얽혀서 의미를 캐내는 작업이다. 우선적으로 대상을 만든 이의 의도는 물론 그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자신의 의도를 다양한 비교준거에 의해 통찰하고 그 결과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해석학적 방법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방법에서는 서로 연계되어 있거나 혼합되어 있다. 예컨대 원저자의 의도를 밝힌다고 해도 결국 해석자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이고, 상호교차적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해석학은 궁극적으로 해석자의 주관적 평가나 이해의 선호성이 작용하는 것이다.⁶⁾ 또한 세 번째의 방법이 해석의 객관성을 보증하고 내용을 풍부히 전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들에 비해 우월하거나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상호교차적 방법으로 가기 위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의 해석학적 과정을 밟아갈 수도 있고 서로 보완해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해석의 상황(예컨대 원저자의 기록이 없거나 접촉이 차단되는 경우)에 따라 상호교차적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의 방법

6) 그렇기 때문에 가다머는 해석학이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는가를 논의하고 있다. 해석자의 편견은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것이다. 문제는 그 편견을 열어놓고 텍스트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다(Gadamer, 1975).

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신두리 사구의 경관에 대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호학적 접근, 즉 행위자의 의도를 탐색하기 위한 해석자의 이해를 부가하는 방법에 의존할 것이다. 신두리 사구에 꽂혀 있는 깃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다’라는 문구에 대해 과연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깃발행위자들의 의도와 이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의미부여에 의존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⁷⁾

3.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1)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탄생과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학군에서는 자본주의를 역사적 생산양식의 한 발전단계, 즉, 원시공산사회로부터 생산력 발전에 부응해 발전된 생산양식으로 보고, 자본과 임노동의 생산관계가 지배적인 시장체제로 정의해보고 있다. 자본주의는 모든 대상을 교환가치로 환원한 상품의 거래를 전제로 탄생했고,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임금과 착취에 기초한 생산관계가 주를 이루는 사회이다.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독특한 경제체제와 이에 상응하는 매우 복잡한 사회관계들(이를 단순히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총체로 융합으로 보기도 하지만)로 이루어진 사회이고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한때 서구에서 풍부하게 진행되었던 ‘자본주의 이행논쟁’은 자본주

7) 그러나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풍부한 분석을 위해서는 행위자들과의 면담이나 그들의 수기, 그리고 사회기호학이 강조하는 맥락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필자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연구자 자신의 해석에 치중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해석적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두 번째 흐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의 출현과 발전방향을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게 했고,⁸⁾ 사회구성체론은 선진자본주의뿐 아니라 전통의 전(前)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접합된 형태로서 제3세계의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폭넓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진균, 1983). 자본주의가 원격지 무역 시장을 통해 발전했던 생산력 발전을 통해 내부의 계급투쟁의 결과로 발전했든, 그리고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복잡한 얽힘 속에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고 모든 이들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생산관계의 변화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이행과 발달과정을 진단해보고 있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 발달의 과정을 제도나 정신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는 일군의 학파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더 넓혔다. 합리성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왜 유독 유럽에서만 존재했는가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속에서 발굴해본 베버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중국이나 고대 바빌론, 인도 등지에서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이 많이 있었지만 “가계와 경제가 분리되고, 이윤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적인 시장교환에 의존하며 부기에 기초한 회계방식을 도입한” 합리적 자본주의는 오로지 서구사회에서만 탄생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인간의 유의미한 행위를 촉발하고 규제하는 정신적 가치인 종교에서 그 원류를 찾아보고자 했다. 즉, 그는 금욕과 절제를 구원의 징표로 삼았던 개신교 윤리가 계산과 절제를 원리로 삼았던 자본주의 정신과 선택적 친화력을 가졌던 결과로 서구의 합리적 자본주의가 탄생했다고 보았다(Weber, 1997).

자본주의의 정점에는 시장이라는 공간이 놓여 있다. 플라니(K. Polanyi)는 인간을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자연을 부동산이라는 상품으로 전환시키고, 교환을 위한 화폐를 지배적인 교환도구로 삼는 순간 시장은 이제 ‘자기조절적인(self-regulatory)’ 존재가 되어 그를 낳은 사회로부터 ‘탈(脫)배태’와 되면서, 모든 대상을 교환가치로 환원시키는 ‘악마의 맷돌’로 묘사하기도 했다(Polanyi, 1998).⁹⁾

8) 이른바 자본주의 이행론에서 일기에 해당하는 돌(Dobb)과 스위찌(Sweezy) 논쟁과 제 일기에 해당하는 논쟁들을 참고할 것.

이를 통틀어 간단히 정의해본다면 자본주의는 시장에서의 상품교환을 통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관계와 생활방식, 그리고 그 문화적 가치가 지배적인 체제임을 말한다. 자본주의는 모든 대상(object)을 교환 가치, 즉 상품의 형태로 변환해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장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2)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상생(相生)적이면서도 대항적인 두 실체, 즉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두 요소를 이념적 축으로 삼고 있는 정치체제이다. 소수의 권력집단이 독점하고 있던 통치와 권력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구성원에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전제 혹은 독재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이다.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의지에 의해 권력을 이양한다는 점에서 그 안에는 자유가,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인격적 신분과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리가 숨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분출되어 방임의 형태로 나아가거나 소유와 재능의 자유가 발휘될 때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평등적 요소와 자유는 긴장관계에 있다(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 1992).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서구에서 탄생한 민주주의는 부르주아계급이 소유권의 자유를 보장받는 대신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을 부여받는 계급타협의 산물로 보고 있기도 하다(Bobbio, 1999). 따라서 자유와 평등 중 어느 요인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는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이다(박호성, 1999).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통치권력의 근원이 다수를 이루는 구성원에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집행과

9)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포디즘 단계를 넘어서 소비의 미학화가 진행된 소비자본주의에 이르게 되면 자본에 의해 끊임없이 창조되고 관리된 '욕망'이 체계의 한 속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정에서도 직접민주주의든 대의제를 통한 간접민주주의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다. 민주주의적 절차의 이념형은 고대 폴리스에서 진행되었던 것처럼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과정을 거쳐 가능한 다수를 대표하는 의견으로 수렴되는 대신 구성원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권리 등이 뒤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 절차의 방식중의 하나가 다수결이다. 사실 다수결 원칙은 만장일치의 의견수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채택하는 차선의 방법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때로 ‘우중(遇衆)정치’ ‘다수의 횡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¹⁰⁾ 또한 역설적으로 권력이 소수집단에 독점되는 전체주의적 지배가 다수의 방식으로 지지되기도 한다.¹¹⁾ 정치적 평등의 표현인 일인 일투표제의 다수결 원리가 때로는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를 저해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와 심의(審議)민주주의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방임 혹은 우증적 전체주의를 예방하기 위해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견해를 말한다¹²⁾(Macpherson, 1981). 이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토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과 그 실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있다.

10)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의 이중성, 즉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통치방식과 다수결의 우증성에 대해 주목했다(Tocqueville, 1980).

11) 그 대표적 사례가 독일 국민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등장한 히틀러 파시즘이다.

12)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는 천부의 권리를 지닌 개인이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통해 권력을 이양, 견제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보장되는 것이다. 일부만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던 과두제적 제도와 달리 민주주의는 그 사회 혹은 조직을 구성하는 주체들에게 참여와 의사결정의 권리를 부여한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은 구성주체의 범위에서 제한적인 계급(부르주아)과 성(남성)으로부터 노동자 농민 등의 민중, 그리고 여성으로 점차 그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는 실제로 그 내용적 가치를 상실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실질적 참여가 다시 강조되고(참여민주주의), 이들이 의제를 숙의하고 그 실행을 통제하는 심의과정(심의민주주의)이 강조되고 있다.

3)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공공성

근검과 절약을 기준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정신과 자유와 평등원리를 기준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결합이 바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이념형’이다(Novak, 1983). 고삐 풀린 시장의 욕망이 사회를 교란할 때 사회의 공격과 유화(宥和)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사회가 전체주의로 경직될 경우 파시즘의 체제로 시장을 지배하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로 제어하기도 한다(Polanyi, 1979). 베버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 자본주의는 이미 그 안에 무한대적 욕망을 스스로의 자정하는 요인이 내장되어 있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간과한 하이예크도 사실은 서구 자본주의의 자율적 자정을 전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현원·정진영, 2006).¹³⁾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친화력을 맺게 되면 경쟁과 소유의 자유뿐 아니라 책임과 절제, 공공성과 평등의 원리 등 사회적 윤리에 그 욕망이 조절된다. 이른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 영역, 개인의 욕망과 공공의 선, 방임과 절제가 조화를 이룬 이념형적 체제인 것이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운영공간은 공공영역이며, 이 공공영역은 근대시민사회의 산물로서 국가나 가족 및 지역공동체의 집단적 규약이나 강제로부터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한 시민들이 서로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과 계약을 통해 형성한 공간이다. 개인의 자연권적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계약을 통해 상호 인정이 수행되는 공간이다. 그 상호 인정의 계약 속에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소유에 대한 권리, 양보, 절제, 양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지배(법률적 통제) 속에서 존재하고, 국가와 대립, 긴장, 복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또 하나의 공간, 즉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 가져야 하는 의무와 권리 이외에 그들 스스로의 의무와 권리(이는 주로 시민법이나, 종교, 도덕, 규율, 관행 등으로 이루어진다)

13) 물론 합리적 자본주의가 곧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정한 게임, 투명한 정보의 교환은 공공성의 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를 행사하는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등장이 지체되었거나 그 영역이 매우 협소한 사회에서의 공공영역은 곧 국가영역을 의미하고 개인들은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채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국가권력에 의해 훈육되는 ‘국민’으로만 존재한다.¹⁴⁾

개인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시민사회 형성의 전제이며 또한 결과이다.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의식을 가지고 그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법적 강제를 받는 국가영역뿐 아니라 도덕적 규제를 받는 시민사회의 공공영역 속에서 행사된다. 공공영역에 대한 시민사회론적 접근은 시민사회가 곧 합리적 의사소통의 장(場)임을 강조한다. 노동과 언어는 체계(system)의 근간이며 도구적 이성이 아닌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언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의 장이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다(Harbermas, 1985).¹⁵⁾ 공공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타자들 간의 상호 인정은 단순히 인간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덕목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성되어야 한다. 자유, 평등, 박애 등의 정신 속에 상호 인정과 공정한 절차를 통한 계약적 태도, 공공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사회의 덕목은 자연에 대한 관계까지도 포함한다. 자연에 대한 생태적 관점은 물질적 이윤의 개념을 성찰하게 하고 합리적 의사소통과 민주주의 원리가 집약된 시민사회의 정신을 고양시킨다.

14)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인은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고, 식민지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지닌 채 국가에 대한 의무, 즉 천황폐화에 대한 국가충성주의로 규율되었다. 나치즘하의 독일 국민들이 보여준 민족주의는 다름 아닌 국가주의이다.

15) 하버마스는 이러한 공공영역이 관료주의화된 국가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체제에 의해 위협받고 식민화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사회는 지체된 공공영역의 구성과 과잉화된 식민논리가 교차하고 있다(Harbermas, 1985).

3.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1) 개발독재와 자본주의의 전개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떠한 역사적 경로를 거쳐 오고 있는가? 자본주의의 맹이론(萌芽論)으로부터 사회구성체론,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 등 발전주의 국가론, 소비자본주의론과 같이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전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병존해오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그 성격의 일면을 논해볼 수 있을 것이다.¹⁶⁾ 196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 성격(1960년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인구가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한국사회가 불과 30여 년 만에 그토록 엄청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국가의 역할에 있었다. 한국사회의 국가역할론은 1970년대 일군의 학자들이 제기한, 일본의 위로부터의 산업화를 설명하는 ‘발전주의 국가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Johnson, 1982). 커밍스는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식민지적 발전국가론을 주창한 바 있는데, 일제시대의 유사한 발전국가전략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시도

16) 한국의 내적인 역사발전의 동인을 마르크스의 단계론에 의거해 계급 동학으로 설명해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내재적 발전론 혹은 자본주의 맹이론은 이미 17세기경 조선사회에도 생산력의 발달과 함께 시장을 지향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농이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맥을 같이해 수공업과 상업 등의 진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바 있다(김용섭, 1980; 강만길, 1978). 하지만 이른바 조선사회의 자본주의 맹이론은 물론 내재적 발전론을 주장하는 민족사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해외 한국학의 일부 학자들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비로소 조선이 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한다(Eckert, 1997). 한국 자본주의 성격에 대해서는 ‘모순과 변혁’을 들여다보기 위한 사회구성체론 논쟁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이 사회구성체론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는 물론 제3세계 발전론, 즉 세계체계론과 다양한 종속이론의 분과에 영향 입은 바가 크다. 이른바 한국사회를 중심부 자본주의와 구분해보려는 ‘주변부자본주의 논쟁’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한국자본주의의 주변부 입장과 달리 자본주의의 단계론을 강조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한국사회가 이미 자본주의 성숙기를 지나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들어섰다는 논리를 주장하기도 했다(한국사회경제학회 편, 1991; 이대근·정운영 외, 1984; 박현채·조희연, 1997).

되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Cummings, 1997). 여하튼 신고전학파의 모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과 경쟁의 모델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는 국가에 의해 “선택되고, 때로 왜곡되고, 조정된” 시장과, 국가에 의해 훈육되고 지도된 재벌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혹은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면서 국가가 어떻게 시장에 개입했고, 국가가 어떻게 기업을 육성했으며 세계 수출시장에 어떤 식으로 편입했고, 노동분야를 어떻게 통제관리했는가에 많은 학자들이 주목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 중에 일군의 학자들은 이들 아시아의 국가들이 유교주의 문화권이라는 점에 착안, ‘유교문화’가 어떻게 산업화에 영향을 미치었는가를 설명하려 하기도 했다.

한국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앰스덴의 책 『아시아의 차기 거인 (Asia's Next Giant)』에 매우 선명하게 요약되어 있다. 앰스덴은 한국이 19세기 일본의 ‘학습자’였으나 이제 ‘선생’으로 등극했다고 주장하면서 ‘과감한 지원(subsidies)’과 ‘냉혹한 처벌’을 통해 국가는 재벌을 길들이며 국가 주도의 산업화 프로젝트에 동원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경제기획원과 같은 관료조직을 통해 경제성장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했고 조세 감면, 기술창조, 수출산업에 대한 장려 그리고 노동에 대한 통제 등 실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개입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Amsden, 1989).

1990년대 ‘잘 나가던’ 한국사회가 통칭 금융위기로 불리는 IMF사태를 맞이하면서 국가 주도 경제성장의 종언이 선언되고, 글로벌금융경제의 측면에서 한국 자본주의사회를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소비문화론 등에 영향을 받은 일군의 학자들이 한국사회의 자본주의를 소비문화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조명하기에 이른다. 그동안 생산관계나 국가역할, 기존의 유교주의 등과 같은 거시적인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미시적 측면의 소비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본주의 속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병행되었다. 한국사회는 1980년 후반기에 이르러 그동안 소비시장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상승하면서 구매력을 갖추게 되고, 이들 노동계층이 중산층과 함께 소비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소비자본주의의 문턱으로 접어든다. 상품구매의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의 급속한 확대와 상품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신용카드의 급증, 다양한 상품 디자인의 출현, 특히 IT 산업의 폭발적인 확대, 상품의 미학이 지배하는 일상생활의 출현 등 한국사회는 명실 공히 소비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유철규, 1992; 백옥인, 1994; 정건화, 1994; 김왕배, 2000).

요컨대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미증유의 산업화, 자본주의의 성과를 이루었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시기로부터 오늘날 소비자본주의에 이르는 ‘시공간 압축성장’을 경험해오고 있다. 이중에서도 박정희 정권에 의한 국가 주도형 시공간 압축성장은 이른바 개발을 위해 시민사회의 억압을 극대화한 ‘개발독재’로 묘사된다. 개발독재의 과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요체는 부국강병적인 민족국가의 수립을 위해 자유, 평등, 인권 등과 같은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억압하고, 성장이라는 개발목표를 위해 위로부터의 명령과 질서화를 주창하는 병영적 동원 체제로서 제조업은 물론이려니와 부동산과 같은 의제자본(擬製資本)의 팽창, 개발이익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토건국가적 개발의 성격을 안고 있었다.¹⁷⁾

2)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는 한국사회가 식민지 해방 이후 신생 국민국가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우산 아래 태동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고 사적 소유

17) 권태준은 개발독재를 시장경제 내지는 자본주의 이론에만 준거해서는 설명할 수 없고,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자본주의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공동체적 발전이었다고 평가한다(권태준, 2006).

를 보장하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사회연대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나 계획경제와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인민민주주의와는 다르게 구성되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평등보다 자유라는 개념이 더 우선시되었다. 한국인들에게는 일제 식민지 종속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자유를 의미했고, 한국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엘리트들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념형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성취하고 지향하고 있던 근본 내용들, 예컨대 풀뿌리 자치를 통한 민의 반영, 지역사회에서의 자발적 결사체 등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 의무와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덕목,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법정신 등이 결합된 것은 아니었다(이나미, 2005; 강정인 외, 2002).

한국사회에 도입된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시대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블록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되고 형성된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그 체제가 표방하는 보편적 가치보다는 국가생존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反共)’적 가치가 주를 이루어왔고,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한국사회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곧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반공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반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인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제약하는 현상이 벌어져왔다. 간단히 말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했던 보편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반공과 국가안보를 내용으로 하고,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실행되도록 하는 ‘특수성’을 지닌 자유민주주의였다.

서구의 경우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강한 친화력을 가져왔다. 집단의 ‘굴레’나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을 주체화(subjectivity) 하는 과정이 곧 자유였다. 개인이 집단 특히 집단적인 종교적 교리나 국민주의와 같은 집단적 민족감정에서 벗어나 개인의 개성, 자율, 능력, 취향, 욕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대와 태도가 곧 자유주의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한계

규정에 대한 논란이 당연히 뒤따르게 되었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교차지점에 대한 많은 논쟁이 벌어져왔던 것이다.

근대시민사회에서 공적 영역은 천부적으로 자유 권리를 지닌 개인들이 상호계약을 통해 공공성을 창출한 집단 영역으로 바로 이 영역에서 개인의 욕구와 공공의 욕구가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되는 지점이다. 국가주의의 집단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공적 영역의 창출을 기대하기 힘들다. 전체주의에서 개인은 오로지 집단을 위해 존재하고, 집단적 감정에 함몰되어 있을 뿐으로 그들이 존재하는 공적 영역은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이 아니라 개인의 성찰과 자유가 박탈된 국가 영역일 뿐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국가주의적 집단주의 속에서 성장했다. 국가안보와 산업화의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주의적인 집단주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민주주의와는 오히려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역설은 형식 민주주의는 그 명분으로 인하여 자유와 평등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 추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자유와 민주에 대한 추상적 가치가 명분으로나마 표출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억압하는 반공적 이데올로기 체제에 대한 회의와 도전이 일어난 것이다. 그 도전은 지난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민주화투쟁으로 반영되어왔다.

4. 공공성의 부재

1) 개발의 욕구와 공공성의 부재

권위주의적 산업화의 시대의 개인은 국가라고 하는 집단적 실체에 의해 가려진 존재였다. 개인은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과 반공안보라고 하는 국가주의적 모델에 따라 조율되었고, 이에 순응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사회적 포섭과 배제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배제는 일차적으로 물리적 폭력과 이데올로기적 설득, 위협, 강제력 그리고 일반시민들 스스로의 동의에 기초한 헤게모니적 지배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조직과 집단, 욕구체계는 다양하게 분화된다. 서로 다른 이해집단들이 충돌하게 되고, 계층, 집단, 개인 간 갈등이 분출되며 다양한 이익과 행위의 표준원리를 가진 집단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민주주의는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고 협의하는 가치와 절차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갈등은 이런 구조적 분화를 통합하고 상호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와 현실정치와의 간극과 지체에 있었다. 다원주의로의 분화된 다양한 욕구는 민주주의의 정치체제로서 통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억압적 통제를 통해 권력을 지속화하려는 정치집단과의 마찰로 인해 한국사회는 그간 오래 동안 ‘민주화’의 장정과 갈등비용을 치러왔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속도와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의 괴리는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노동계급이나 시민사회의 욕구를 통제하고, 국가에 의해 길러진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시민적 덕목이나 규범 또는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칭송했던 것들의 형성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는 오로지 ‘단기간에 성장목표를 달성’하려는 모든 사회구성인자들(국가, 기업, 집단, 조직, 개인)의 무한 경쟁이 존재할 뿐이었다(송복, 1994).

경제적 하부구조는 상부구조와 마찰, 지체, 협상의 과정을 겪게 마련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일방적 지도나 훈령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상호계약, 설령 그것이 비대칭적이라 하더라도 수평성을 지향한 협상, 신뢰, 책임, 정직, 정당한 경쟁, 보상, 배려, 인권, 사회적 연대 등으로 요약되는 시민사회의 도덕성에 의해 해소되어왔다. 그리하여 서구 자본주의 발전은 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가치의 발전과 병행되어왔다. 시민적 가치의 발전은 바로 합리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리하여 다양한 이해집

단 간의 토론과 양보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가 생활세계에서 실현되는 공공영역(public sphere)의 확장이다.

이 공공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의 방임적 자유와 기계론적 평등을 어떻게 차단하고 민주주의가치를 담보해내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자유를 스스로 어디까지 제한하고 공공영역에 이양할 것인가? 공공영역과 국가는 나의 자유영역에 어디까지 개입하고 그 개입의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개항 이후 한국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궤적을 밟지 못했다. 목표주의에 함몰된 경쟁사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의 절차적 과정에서의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반공을 명분으로 부(富)의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사회에서는 계약에 대한 질차들, 경쟁의 정당성, 보상의 타당성, 사회적 도덕이나 윤리는 지체되거나 무시된다. 부와 권력, 명예 등의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획득한 이후의 처세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별 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상스럽게도 유교주의 전통에서는 사대부 엘리트 층의 사회윤리의식이 매우 강조되었 으면서도 산업화시대 이후 상류층에게는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을 지향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ness oblige)’를 발견하기 힘들고, 일반 시민들의 시민적 덕목에 대한 소양은 매우 빈약하다.

한국사회는 집단주의적 가치나 태도, 생활방식이 강조되면서도 이러한 집단주의는 가족주의의 연고에 기초한 집단주의로 공동체적 시민사회와는 별다른 상관없는 집단주의이거나 오히려 그 발전을 저해한다. 한국사회가 강조하는 공동체는 폐쇄적 연고주의에 기반을 둔 가족주의적 집단주의이고, 이러한 집단을 벗어나면 파편화된 개인주의의 구성체일 뿐이다(박영신, 1995). 한마디로 말해 한국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덕목, 합리적 의사소통에 기초한 공공영역과 공공성이 빈곤한 사회로 성장해왔다. 공공성에 기초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연고주의적 집단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로의 장벽에 갇혀 자유민주주의를 성숙시키지 못한 자본주의는 폐쇄적 집단의 자기이해만이 우선시되는 욕구사회를

형성하게 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공공의 장, 자발적 결사체와 같은 조직이 미비한 형식적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개인이나 연고에 기초한 집단주의의적 관계가 지배적이다. 사회연결망 속에 나타나는 신뢰는 바로 그 집단 속에서만 작동되어 익명적 관계가 지배적인 시민사회의 공공성과 연계되지 못한다.¹⁸⁾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유와 평등 의사결정의 토론과 참여 등 이 모든 원리들은 상호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상호성이란 최소한의 거래 관계이며 계약관계로서, 최소한 받는 만큼 주어야 하며(give and take),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를 지녀야 하고,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는 만큼 타자의 이해들, 즉 공공성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Alejandro, 1993).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의 욕구만을 충족하려는 목표 달성주의적 경쟁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이러한 민주주의와 친화력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하고 방해한다.

2) 천민성(賤民性)과 우중성(愚衆性)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윤추구의 본능을 용인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도덕관념에서 출발한다(박우희, 2001). 이념형적으로 자본주의는 중세봉건사회의 집단적 공동체관계 속에 매몰되었던 개인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동하고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윤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욕구의 추구는 당연히 시장에서의 경쟁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윤을 추구하는 도덕관념은 그러나 자기절제와 합리적 계산, 교환을 전제로 성립한다. 다시 베버로 돌아가 보자. 베버(M. Weber)는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18)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사회연결망에 기초한 사회자본은 특정한 집단 속에서만 발견되는 폐쇄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이 우세하다. 퍼트남이 구분한 두 유형의 사회자본을 참조하라(Putnam, 2000).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서구 합리성에 기초한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을 개신교의 윤리에서 찾아본 바 있다. 근대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초는 중세 기독교적 집단문화로부터 천부의 권위와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의 출현에 있었다. 그리고 이 개인은 중세기독교의 권위독점체인 교황이나 신부집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하느님과 교통을 통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 구원 확신의 절대명제는 ‘금욕과 절제’이다. 이 금욕과 절제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하느님께 헌신하는 자세’야말로 구원의 전제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개신교의 태도는 오늘날 평화적 교환을 통해 이윤을 확보하고, 가계와 기업이 분리된, 그리고 부기와 계산을 이용하는 합리적 자본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다. 자본주의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지만 합리성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개신교 윤리를 지닌 서구의 몇 나라에서만 발견될 뿐이다. 물론 ‘소유권의 절대적 인정과 시장경쟁을 통한 이윤확보’ 그 자체를 도덕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는 지나치게 합리적 계산과 효율성을 추구한 나머지 냉혈성을 띠게 되었지만 금욕과 자기절제의 정신이 없는 자본주의, 즉 욕망에 사로잡혀 부(富)만을 축적하는 자본주의의 유형은 저급한 수준의 천민적 자본주의일 뿐이다.

천민자본주의는 합리적 정신이 결여된 자본주의이다. 개인의 무한대적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한경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 하며 개인의 소유에 대한 무한대적 인정을 요구하는 자본주의이다. 즉, 타자와의 상호 인정과 시민적 덕목을 결여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절차를 결여한, 따라서 공공성을 상실한 자본주의이다.

오늘날 지역단위에서는 이러한 천민자본주의가 종종 개발연합의 형태로 나타난다. 개발연합은 토착자본과 지자체의 행정기관, 교육기관이나 기타 결사체 그리고 주민 모두를 포함하는 개발수행의 유기적 통합체를 의미한다.¹⁹⁾ 때로 개발연합은 외부에서 거대자본을 초빙하기도 해 지역

19) 이러한 개발연합은 성장연합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Molotch(1976), 김왕배(2000).

사회의 발전을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는 수행자로서 주로 지역의 문화, 교육, 재개발사업 등을 관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발연합은 대개 지역의 수익사업모델을 따라 장소를 마케팅하는 관광, 주택 등의 토지개발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개발연합이 노리는 것은 노동을 통해 부를 창출하기보다는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려는 ‘지대자(rentier)’의 속성이 강한 것이 일반적이다. 개발연합에는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자산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이데올로기가 유포되는데 그 바탕에는 토건국가형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²⁰⁾ 그리고 명목적으로 개발연합은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개발연합의 주체는 토착 혹은 외부자본과 행정기관이다. 때로 이 양자는 긴장과 갈등관계에 놓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개발사업을 통해 이득을 창출한다는 이유로 거의 상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개발은 종종 지역주민의 다수가 개발을 찬성한다고 하는 다수결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기도 한다.

한국인들이 사고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그 질적인 차원에서의 인식, 합리적 의사소통과 소수자의 배려, 공공성의 존중과는 거리가 멀고 다만 다수에 의한 결정이라고 하는 형식원리가 강조되어 있다. 다수에 의해 결정된 의견이 곧 민주주의적인 것이다. 이러한 다수결은 집단적 방임과 관련 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은 민주주의적인 것이므로 더 넓은 차원의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의해 검증받거나 제약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방임적 형태의 민주주의의 개념이 무한대적 욕망을 추구하려는 천민적 자본주의와 결합하게 되면 ‘소유권(소유에 대한 이행 및 변형권리 포함)’에 대한 다수결정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무한대적 개발이익을 추구하려는 ‘권리의식’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형태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을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의미로 ‘우증적 천민자본주의’

20) 토건국가의 개념과 한국 생태계의 교란에 대해 홍성태(2005)를 볼 것.

로 명명하고자 한다.

신두리의 깃발은 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욕구, 즉 지역 사람들의 다수결의 욕망을 국가와 시민사회가 받아들인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즉, 지역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니 환경이나 생태보존보다는 지역개발을 염원하는 다수의 의결을 따르라는 요구의 상징물이다.

4. 마무리

신두리 사구에 걸려 있는 깃발은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자유를 우선시하는 한국형 민주주의는 그러나 타자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방임의 형태로, 이윤추구를 생명으로 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기적 탐욕의 편향으로 그려져 있다. 사적인 자유와 권리들이 합리적 의사소통과 타자성찰을 통해 공공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사회의 역할은 그 사회의 진보수준을 대변한다. 신두리 사구의 깃발은 개인과 일부 집단의 탐욕이 만들어낸,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의 징조는 찾아볼 수 없는 천민성과 우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급속한 물질적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사회윤리를 포함하는 전(全)사회체제의 통합구조로 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성장의 미몽에 젖어 부의 분배나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이를 가능하게 하는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정신과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주의와 연고주의를 뛰어넘는 공공영역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은 투기적 이윤을 노리는 지자체와 지역토착자본 그리고 주민들의 개발연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자연환경을 보호해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려거나, 생산적 노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려 하기보다는 의제(擬製)자본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보유하려는 투기적 행위가 만연되어 있고 이를 통한 이득담보자로

서의 ‘지대자(rentier)’들과 이에 편승해 부를 늘리려는 ‘무임승차자들’이 지역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과 소유의 절대화, 이기적 욕망의 무한대적 실현을 의미하고, 민주주의는 그러한 무한대적 소유권과 욕망을 실현하려는 권리만을 의미한다. 한국사람들에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다수가 원한다면 자신들이 ‘소유한 것’들의 개발과 교환가치로의 상품전환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 과정에서 타자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방임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교차 지점으로서의 공공영역과 환경과 생태적 사유까지도 포괄하는 시민덕목의 실현의 장으로서의 공공성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

요약컨대 신두리 깃발에 나타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외침은 타자 인정, 배려, 절제, 의사소통 등의 개념의 결합체인 시민성과 거리가 먼, 즉자적이고 즉물적인 상태의 천민성과 우중성을 표출하고 있다. 신두리 사구에 꽂혀 있는 깃발은 바로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개발독재시대의 토건국가형 발전주의 신화가 신자유주의의 외투를 입고 우리 사회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보론

국가보상의 침묵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치형태에서 대한민국은 군주제, 총통제,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고,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이나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 자유를 보장받는다(12조 1항). 그리고 이 자유와 그에 따른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시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37조 1항). 한편 23조 1항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보장의 원칙을 드러내고 있다. 즉,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의 불가침성을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와 재산소유권의 보장을 일차적으로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제한과 한계를 아울러 규정한다. 헌법 12조 2항에서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을 논의하면서 바로 이어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자유의 절대성에 한계를 긋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어 “그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해 자유의 우선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재산권에 대해서도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재산권 보장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아울러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재산권의 행사 역시 공공복리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나아가 이를 위해 수용 및 제한 할 수도 있음을 표명한다. 즉,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일차적으로 보장하고 인정하지만

공공적 필요에 따라 일정 정도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그 제한의 대가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러야 하며 그 보상은 공정해야 함을 달고 있다(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어 헌법의 9장 122 조는 “국가는 국민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평가와 기준에 따라 토지이용 및 개발, 보존이 이루어짐을 밝힌다.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임을 드러내고, 다만 그 자유와 소유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제한을 ‘공공성’의 기준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공공성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불분명하지만 제한조항에 의한 자유와 소유의 제약은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이차적인 것이다. 즉,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의 성격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소유를 제한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란 용어 대신에 민주공화국, 자본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재산권의 보장을, 복지국가라는 용어 대신에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등의 용어를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 있는 의미는 위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골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것발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재산권을 행사해 시장으로부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자유와 (제1원칙)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행사(제2원칙) 사이의 갈등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신두리의 사구지역에 대한 개발의 권리(자유)가 공공의 요청에 의해 제한된다면 첫째는 소유주의 자율적 동의와 둘째는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아마 이 보상은 결국 소유주와 국가 간의 거래와 흥정의 산물일 것이다)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이 동의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소유권의 제한은 일단 제1원칙을 침범하는 것이 되므로 매우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제1

원칙은 사실상 무한대적 자유권리와 재산권의 보장이다. 이 무한성을 유한대로 제약하는 것이 국가권력이다.²¹⁾ 소유주의 자율적 동의는 보상을 요청하는 권리와 함께 공공성에대한 인지(認知)를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공공성’의 기준과 합의에 이르는 절차이다. 개인이나 국가 모두가 ‘합리적 의사소통’의 게임에 들어가 합의에 도달하는 절차가 곧 민주적 절차이며, 그 사회의 시민적 역량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21) 예컨대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이루어졌던 그린벨트는 일정한 지역공간을 공공화 함으로써 환경생태와 자원을 보존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나 개인재산권과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한계가 있다. 만약 그린벨트를 유지하려 한다면 개발제한을 당한 집단들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 정당한 보상이 주어 져야 할 것이다.

❖ Abstract

‘Shinduri’ capitalism and democracy

Kim, Wang-Bae

A sand hill where the precious plant and the scared insects inhabit are spreading alongside the seashore at a small village, Shinduri in a Chungchung province. The sandhill has been protected as the national treasury area by the state supported from civil environment organization, and any development are prohibited. However, the flag with the letter, “our country is democratic and capitalist society” is standing at the center of the sand hill. The owner and residents are vehemently requiring the allowance of right to develop because of the majority of that population agreement. The author has made an effort of interpreting their intention and concept on democracy and capitalism through the sign of the flag, mobilizing the hermeneutical semiotics.

Keywords: Shinduri, capitalism, democracy, space semiotics, growth coalition

참고문헌

강만길. 1978.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강정인 외. 2002.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세상.
 권태준. 2006. 『한국의 세기 뛰어넘기: 산업화, 민주화, 시민사회』. 나남출판
 기호학연대. 2002. 『기호학으로 세상 읽기』. 소명출판.
 김병국 외. 1999.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김왕배. 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김용섭. 1980. 『조선후기농업사연구 I』. 일조각.
 김한원·정진영 외. 2006. 『자유주의: 시장과 정치』. 김한원·정진영 엮음. 부키.
 노르베르토 보비오(Norberto Bobbio). 1999.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황주홍 옮김. 문
 학과지성사.
 로크(J. Locke). 1977. 『통치론』. 이극찬 옮김. 삼성출판사.
 루소(J. Rousseau). 1999. 『사회계약론』. 정성환 옮김. 홍신문화사.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 1983. 『민주자본주의의 장래』. 김진현 옮김. 한국경제연
 구원.
 맥퍼슨(C. B. Macpherson). 1982. 『자유민주주의에 희망은 있는가』. 이상두 옮김. 범우
 사.
 미셸 알베르(Michel Albert). 1993. 『자본주의 對 자본주의』. 김이랑 옮김. 소학사.
 박영신. 1995. 『우리 사회의 성찰적 인식』. 현상과인식.
 박우희. 2001. 『한국 자본주의의 정신』. 박영사.
 박현채·조희연. 1997.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한울.
 박호성. 1999. 『평등론』. 창작과비평사.
 백육인. 1994. 『대중소비생활구조의 변화』, 《경제와 사회》, 봄호.
 변형윤 외. 1985. 『한국사회의 재인식 1』. 한울.
 사무엘 팔머 외. 1979. 『제3세계의 이해』. 형성사 편집부 엮음. 형성사.
 송복. 1994.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현대문학.
 유철규. 1992. 『80년대 후반 이후 내수확장의 성격』. 《동향과 전망》, 겨울호.
 이나미. 2005.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이대근 외. 1984. 『한국자본주의론』. 이대근·정운영 엮음. 까치.
 정진영. 1983.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와 종속적 경제발전』. 《역사와 사회》, 제1집,
 229~287.
 철학아카데미. 2002. 『기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소명출판.
 _____. 2004. 『공간과 도시의 의미들』. 소명출판.
 칼 폴라니(Karl Polanyi). 1998. 『사람의 살림살이 I』. 박현수 옮김. 풀빛.
 한국내셔널리스트. 2004. 『바람과 모래가 만들어 낸 생명의 땅, 신두리 해안사구』.

- 내일신문 한국사회경제학회. 1991. 『사회경제평론 3: 한국자본주의의 이해』. 한울.
-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2001. 『현대민주주의론 I』. 손호철 감수. 창작과비평사.
- 홍성태. 2005.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한울.
- Alejandro, R. 1993. *Hermeneutics, Citizenship, and the Public Spher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Alford, R. and R. Friedland. 1985. *Powers of The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msden, A. 1989. *Asia's Nes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lonsky, M.(eds). 1985. *On Sign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runeau, T. and P. Faucher(eds.). 1981. *Authoritarian Capitalism*. Boulder: Westview Press.
- Cummings, B. 1997. *The Place in the Sun*. W. W. Norton & Company.
- Deyo, F.(eds.).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Diamond, L. and M. Plattner(eds.). 1993.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Revisited*.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ckert, C. 1997. *Offspring of Empir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Gadamer, G. and J. Cumming(eds.). 1975. *Truth and Method*. Seabury Press.
- Gereffi, G. and D. Wyman. 1990. *Manufacturing Miracl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ttdiener, M. 1995. *Postmodern Semiotics*. Cambridge: Blackwell.
- Gottdiener, M. and A. Lagopoulos(eds.). 1986. *The City and the Sign*.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 International Publisher.
- Habermas, J. 1985.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eacon Press.
- Hagen, Koo. 1993. "Introduction: Beyond State-Market Relations." in Hagen, Koo(eds.)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 Held, D. et al(eds.). 1983. *States and Societi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Hodge, R. and G. Kress. 1995. *Social Semio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Johnson, C.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won, H. 1999. *The Urgent Future of Korea: Crisis and Opportunity*. Chicago: North Park University.
- McMichael, P. 1996.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Thousand Oaks: Pine Forge Press.

- Molotch, H. 1976. "The City as a Growth Machine: Towards a Political Economy of Pl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2).
- Palmer, R. E. 1969. *Hermeneutic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Polanyi, K. 1979. *The Great Transformation*. Beacon Press.
- Putnam, Robert.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 So, Alvin Y. 1990.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Tocqueville, A. 1993. "On Democracy, Revolution and Society" in J. Stone & S. Mennel(ed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ogel, E. 1991. *The Four Little Drag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eber, M. 1997.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Routledge.

논문접수일: 2008. 9. 6

게재확정일: 2008. 11. 18